

지속가능성 공시 : 기업의 입장과 준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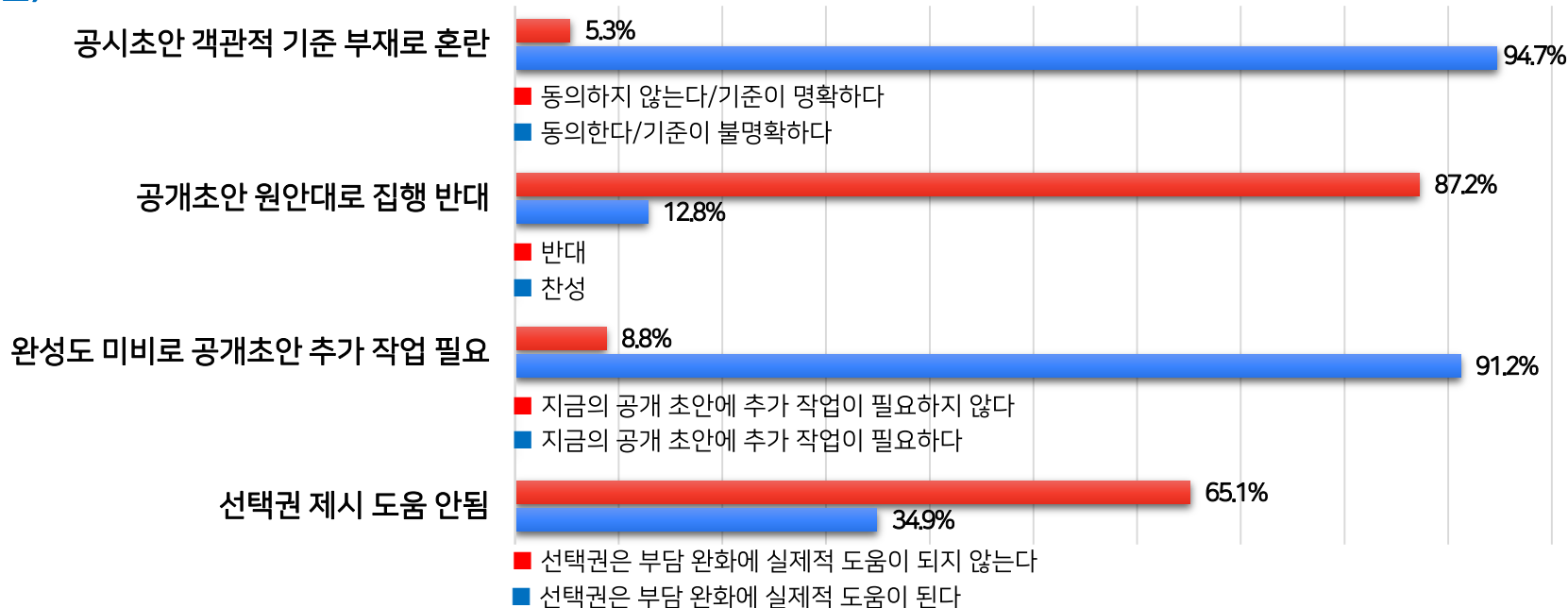
2024. 11.

ESG 정보 공개 원칙 (한국거래소 가이드스, '21.1월)

정확성 (Accuracy)	•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도록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 • 정보의 수집·분석 과정에서 오류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 필수
명확성 (Clarity)	•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맞는 정보, 즉 보고 범위를 명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 • 최대한 정량적 방법으로 ESG 성과를 측정·생산
비교가능성 (Comparability)	• 기업의 목표와 성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 • 동종 업종 내 타사의 ESG 정보와 비교 가능하도록 공개
균형 (Balance)	• 자사에 유리한 정보와 불리한 정보를 균형 있게 공개함으로써 편향된 해석 방지 • 부정적 이슈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부정적 평가 방지
검증가능성 (Verifiability)	•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데이터 수집 → 재무정보 검증 절차와 유사한 내부통제절차 마련 • 독립적인 제3자 검증기관 활용할 경우 검증의 수준, 범위, 과정 등을 함께 명시
적시성 (Timeliness)	• ESG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 • 회계연도 중이라도 재무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이슈는 발생 즉시 공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안)에 대한 수용성

➡ 구체적 기준과 객관적 방법론 부재로 인한 공시 곤란(경제계 공동, 173개 상장회사 응답, '24.7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안) 주요 쟁점

공시방법

보고기업

재무제표 보고와
동일한 연결공시

연결기업 많을수록
공시부담 급증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중요 종속기업
선별 공시 허용

공시위치

일반목적재무보고서
일부로서 제공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사업보고서의 분리

거래소 공시부터
법정 공시로 순차 이행

보고시기

지속가능성 정보와
재무제표 동시 보고

환경부 배출량 정보
통상 6월 확정

재무제표 정보와
지속가능성 정보의
질적 차이

공시항목

Scope 3

국제동향/의견수렴?
국내 산업 현실은?

산업별 통일된
배출량 산정기준 부재

추정치 과다 사용으로
정보 유용성 결여

전문인력 부족과
협력업체 인식 부족

기준서제1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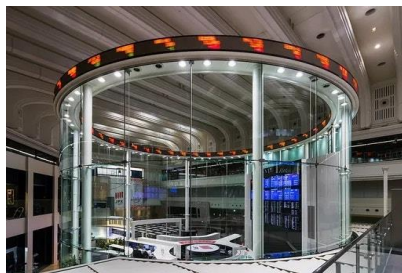
정부 정책 목적상
공개 권고 항목

부처별 정보공개제도
취지 상이

지속가능성 개념의
과도한 확장

투자자에 주는
정보 유용성 의문

주식시장 규모 국가순위 (2024. 2. 29 기준)



EU CSRD 법제화 현황 (2024. 10. 31 기준)

No	국가	협약	발의	통과	No	국가	협약	발의	통과
1	덴마크	✓	✓	✓	16	룩셈부르크	✓	✓	
2	노르웨이	✓	✓	✓	17	독일	✓	✓	
3	루마니아	✓	✓	✓	18	체코	✓	✓	
4	리투아니아	✓	✓	✓	19	네덜란드	✓	✓	
5	리히텐슈타인	✓	✓	✓	20	슬로베니아	✓	✓	
6	불가리아	✓	✓	✓	21	에스토니아	✓	✓	
7	스웨덴	✓	✓	✓	22	사이프러스	✓	✓	
8	슬로바키아	✓	✓	✓	23	스페인	✓		
9	아일랜드	✓	✓	✓	24	폴란드	✓		
10	이탈리아	✓	✓	✓	25	그리스			
11	크로아티아	✓	✓	✓	26	몰타			
12	프랑스	✓	✓	✓	27	벨기에			
13	핀란드	✓	✓	✓	28	포르투갈			
14	헝가리	✓	✓	✓	29	오스트리아			
15	라트비아	✓	✓	✓	30	아이슬란드			

주 : 노르웨이·리히텐슈타인·아이슬란드 등 3국은 유럽경제지역(EEA)/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

자료 : Ropes & Gray, CSRD Transposition Tracker, '24.11.10

공시 부담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역효과

Bloomberg

• Live TV Markets ▾ Economics Industries Tech Politics Businessweek Opinion More ▾

Green

EU Bourses Face Delistings as ESG Rules Hit Multinationals

- Non-EU firms are waking up to January compliance deadline
- EU's corporate reporting rules have met widespread opposition

By Frances Schwartzkopff and John Ainger

November 9, 2023 at 11:00 PM EST

Updated on November 10, 2023 at 11:07 AM EST



Gift this article

Finolex



SAMSUNG



LUXEMBOURG
STOCK EXCHANGE

Lux RI Fund Index

2445.5216

Lux General Index

-0.7299 %
735.7438

LuxX Price Index

-0.478 %
1376.1997

LuxX Return Index

-0.0076 %
2780.7429

글로벌 규제 변동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

기후 관련
글로벌 규제
시행초기
변동성



각국별
기후대응
인프라 격차



다자주의
무역 흐름
균열 우려



Fast
Follower
전략



에너지 전환

- 공급망을 둘러싼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 +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
- 높은 에너지 전환 비용과 공급 불확실성은 탄소누출 및 산업 공동화 야기

EU CSRD

- 자국 내 법제화를 완료한 EU 회원국은 13개국으로 당초 계획 차질 발생
- 독일, 스페인, 폴란드, 체코 등 제조업 비중이 있는 회원국은 법제화 지체 예상

EU CBAM

- 러시아, 중국, 인도 등 EU 주요 교역국 반발과 WTO 권고
-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신중한 입장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 정책노선 변경 예상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행 체계

비전 및 전략

- 대내외 리스크 분석 및 내부 역량 평가
- 비전 및 경영목표 수립
- 추진과제 및 세부전략 검토
- 전략 공개, 실행 및 평가

인프라 구축

- 최고 의사결정기구 설치
- 허브 역할 전담조직 구성
- 사업부서 실무협의체 구성
- 성과평가/HR 전략 반영(조직 및 임원 KPI 반영)

소통체계 확립

- 내·외부 이해관계자 파악 및 이슈 분석
- 임직원 교육 및 캠페인
-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기업 현장의 지속가능성 공시 준비

-  관리 대상 데이터 목록 취합
-  데이터 세트 표준화 작업
-  각 부서별 업무정의서 재검토
-  일하는 방식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
-  원천 데이터 집계·검증 시스템 구축
-  데이터 관리 인력 확보 및 전담조직 신설, R&R 확정, 교육·훈련

지속가능성 공시의 딜레마

-  **기본적 공시원칙(정확성, 완전성, 투명성, 일관성, 유용성)과 충돌**
-  **외부 컨설팅에 의존해야 하는 미래 예측 기반 정보 분석**
※ 단중장기 재무적 영향 76.6%, 기후 시나리오 분석 92.4% 자체 수행 불가(경제계, 173개사, '24.7월)
-  **외부 컨설팅 결과 및 방법론에 대한 기업 자체 검증 불가**
※ 응답 기업 69.8%, “외부 컨설팅 결과를 정작 기업 내부에서 검증할 수 없다”
-  **배출량 검증 전문가도 못 믿는 배출량 값**
※ 배출량 검증 전문가 의견조사(49명)에서 65.3%가 Scope 3 배출량 수치를 믿지 못한다고 응답
(직접 측정 1차 데이터에 대해 '신뢰 못함' 51.0%, 간접 추정 2차 데이터에 대해 '신뢰 못함' 71.4%)
-  **선의로 배출량 산정 대상과 공시 방법을 고도화하는 경우의 부정적 평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를 위한 제반 여건

 세부기준과 활용가이드를 포함하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체계” 완성

 중복적 데이터 산정·취합(공급망 실사) 부담 완화

- 산업부, '27년까지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 계획(EU Gaia-X·Catena-X, 日 Ouranos 벤치마킹)
- 인증 기업 보고서의 공통적 활용방법 모색
- 기업지배구조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점진적 통합

 부당한 경영간섭을 금지하는 현행 법령 정비

- *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등

 제도화 초기 폭발적 수요 증가에 대비한 양질의 검·인증 생태계 조성

- * 현재 국내 탄소배출 검증업체 13개, 검증 자격증 보유자 약 200명 수준

 보고기업에 귀책사유가 없는 '공시 공백'에 대한 폭 넓은 Safe Harbor 마련

- ※ 응답 기업 87.0%, 불투명하게 생성된 정보를 공시하게 됨으로써 법적 리스크 노출 우려



KEF

KOREA
ENTERPRISES
FEDERATION